



# 수질오염총량제

## - 상수원은 맑게, 지역은 책임개발 -

환경부가 경기도 광주시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지난 5일자로 승인함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지역 내의 모든 수질오염원을 총량으로 묶어 관리하는 새로운 물관리 정책으로 수질개선을 이룬 지자체는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을 함께 고려한 선진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물 관리 정책의 큰 변혁을 예고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자세한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도입배경으로는 우리가 상수원으로 의존하고 있는 4대강은 인구 및 산업 활동의 증가로 난개발과 수질오염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등을 확충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획기적인 수질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장, 하수처리장 등에서 배출되는 하.폐수를 농도 중심으로 관리하는 제도 역시 수질 개선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배출허용 농도를 넘지 않으면 오염물질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이 자리하거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너무 많은 폐수가 배출되어 수질개선을 기대할 수가 없고, 폐수배출량이 적은 곳에서는 규제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 전체의 수질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상수원 유역 전체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유역관리의 한 방법으로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근거는 지난 99년 제정된 '한강특별법' 과 2002년 제정된 '3대강 특별법' 이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은 목표수질을 초과한 수계가 그 대상이다. 목표수질이란 유역의 이용현황, 공장이나 인구밀집 등 오염원 현황, 수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서 결정한 수질의 기준치로, 목표수질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삭감하는 등 수질개선 노력을 펼쳐야 한다. 수질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만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이후에는 질소, 인, COD 등으로 확대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자발적인 수질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과학적인 토대위에서 마련된 오염부하량 안에서는 공단이나 주택, 관광지 등 각종 개발사업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목표수질은 지금보다 한층 엄격해지므로 수질개선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오염총량계획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감독하고, 수질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기술이 발전할 것이고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거 정비 등을 통해 환경기반시설이 확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7월 중순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경기도 광주시는 경안천 하류 서하보 지점의 수질을 오는 2007년까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5.5ppm으로 개선해야 한다. 올 1월부터 5월 사이 6.3ppm이었던 이곳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광주시는 인구증가, 축산폐수, 비점오염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85%인 하수처리율을 97%로 끌어올리기 위해 하수처리장을 확충하는 한편, 하수관거를 정비해 누수율을 줄이는 등 오염부하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들을 밝혔다. 오염총량제가 제대로 시행되어 경안천의 수질개선이 이루어지면, 광주시는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공공청사 등의 주민숙원사업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함께 하천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8월 낙동강 수계 부산과 대구광역시에서도 실시되며 2008년까지는 3대강 수계에서 모두 실시될 예정이다. ◀